

융합의 시대에(사물인터넷시대에)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및 심리·사회적 적응을 중심으로-

최장원*

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Measures to improve the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Era of Convergence (in the era of Internet of Things) -Focusing on the Economic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Jang-Won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Welfare Management at Tongmy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 2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적응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는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친구관계,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문화적 적응전략과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경제적 적응, 심리·사회적 적응,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North Korean defectors' economic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status in South Korean society focusing on the specific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 the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225 North Korean defector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conducted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as evaluated to be generally low. Second, North Korean refugees'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 status is generally lower than average, especially cultural adaptation stress, friendship, and satisfaction wi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ird, the psychological and cultural adaptation strategy and social support of defectors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positively and the adaptation stress had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Therefore, strategies which reducing adaptive stress and enhancing psychological and cultural adaptation strategies are needed to be implemented in South Korean society. Based on results, policy alternatives were discussed.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integration, economic adjustment,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upport for settlement

*교신저자 : 최장원(jjaang20@hanmail.net)

접수일 2020년 4월 2일 수정일 2020년 5월 16일 심사완료일 2020년 6월 1일

1. 서론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조정·관리·해소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노력들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통치목표가 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이후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다민족·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문화적 갈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를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증가와 남한사회 적응실패로 인한 문제의 발생은 통합과 공존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1].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말 기준 2만 6,124명이며,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된다[2]. 그러나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이주민이기도한 이들의 이질성은 점차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며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합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초점은 남한 체제로 동화, 흡수하려는 노력은 가시적이나, 이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통합적 논의는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3].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초기 정착과 관련된 정책들이 다수를 이루어,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에 부족한 점이 더욱 커 보인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난민 등과 같이 최근 다분화되어 나타나는 타 이주민 유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들은 오히려 분단체제에서의 이주민이자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지위[4]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주민 정책의 시각지대에 위치하게 된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수성을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 맞추어 정책적 지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통합의 개념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적응실태를 설문문을 통해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개선 방향을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2.1 사회통합의 개념

사회통합은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개인 수준의 사회적응, 관계 등으로부터 사회구조적 차원의 체제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5].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은 사회의 한 구성원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는 통합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다[6]. 그리하여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은 주로 이민이나 귀화 등이 해당되며, 구조적 통합은 하나의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다수의 하위체계가 공동의 질서 아래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6].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reckel[7]은 사회통합을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고 이 두가지 통합이 모두 전제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우선 체제통합은 정치 및 경제제도의 통합에 관한 표면상의 통합정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상호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통합은 본질적인 차원으로서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에 기반이 되는 것을 뜻한다.

Landecker[8]는 규범적 통합, 의사소통적 통합, 기능적 통합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규범적 통합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공통틀 사회체계 내에서 구조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구성원 간 합의를 도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의사소통적 통합을 도출하였다. 이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통합은 사회문화가 고도화되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분업하여 분절화 된 개인들이 필요에 따라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Duhaime et al.[9]은 사회통합을 보다 세분화하여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기계적인 연대, 유기적인 연대에 대한 참여와 접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자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 인구학적 안정성, 사회적 및 경제적 통합, 그리고 삶의 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Rajulton, Ravanera, and Beaujot[10]은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 영역으로 구분하고 사회통합을 정의했다.

국내의 연구로서 홍기준[11]은 사회통합을 "분리 상태에 있던 두 개 이상의 개체가 하나의 개체로 합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정치통합의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통일 이후 인적교류와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 공통의 규

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공통의 생활양식을 습득하여 상호의존관계를 강화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영훈 외[12]는 사회적 차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즉, 사회적 통합, 사회적 배제, 그리고 사회적 응집으로 구분했다. 즉, "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공동체 내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공동체 내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사회통합의 지표로 만족감, 소속감, 적응감으로 제시했다.

이상과 같이 사회통합에 관한 다양한 정의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의 개념을 정리하면, 사회통합이란 남한의 정치경제 체제에 적응하여 남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가치를 공유하여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은 남한사회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응을 완화하고, 정부당국,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경제적, 사회·심리적, 그리고 문화적 적응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경제적 적응이 취업이나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제적 적응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문화적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관점에서 경제적 적응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일반적으로 적응은 물리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여 양호한 삶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13][14]. 따라서 적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여 생존과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연속적인 과정을 의미한다[15]. 그리고 사회 내에서 이러한 적응의 노력이 더욱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대상은 바로 이주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민자나 소수 민족의 지위를 가진 정착민들은 모국에서의 적응 노력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여기서 이주민들의 경제적 적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민들은 이주 초기에 특히 소득,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제적 진입장벽을 경험한다. 이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이주민의 본국 경력과 학력 인정여부 등이 진입장벽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주민의 경제적 부적응은 곧 빈곤, 공공부조예의 장기 의존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이탈 등의 연쇄적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6]. 이에 경제활동을 도모하여 경제적 적응을

돕는 것은 이주민 개인차원의 개입일 뿐 아니라, 거시적 사회차원에서도 통합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지표가 된다[16].

경제적 적응의 지표는 취업여부, 소득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Potocky-Tripodid[17]는 이주민의 경제적 지표로 고용상태와 연간소득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용상태는 직업유무와 종류로 측정하였으며, 연간 소득은 월평균 가계소득수준으로 측정된다. 특히, 경제적 적응에 있어 개인이 가진 언어능력, 정신적 외상경력, 사회적 지지 자원,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이 다양한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 역시 이주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경제적 적응은 남한의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경제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18], 이를 위해서는 소득, 기술, 직업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19]. 실제로 탈북동기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요인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남한에서의 경제적 적응은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본 국민과 동등한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15].

2.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적응

사회통합은 개인, 가치, 구조 및 체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이 중 궁극적 수준의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치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20]. 독일의 경우 체제통합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반면에 가치통합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여전히 완전한 가치의 통합은 이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15]. 이는 동독주민들이 경험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양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의 훼손, 서독주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낮은 상호이해 및 교류 수준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는 궁극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체성 확립,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동질성 회복, 상호이해 및 교류 등 가치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5].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통합 역시 이처럼 가치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사회·심리적 적응은 가치통합의 관점에서의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20]. 하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치통합적 과정에서 흔히 정체성의 혼란, 경직된 사고방식 등으로 인해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문화

적 부적응을 경험하기 쉽다. 따라서 심리·사회적인 적응은 개인 내적 욕구, 개인 외적, 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19]에서 가능하며, 직업을 통해 확보하는 역할, 가족관계의 역할, 기타 이웃관계에서의 역할 등에서 기능을 잘 수행하는 상태[21]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심리·사회적인 적응이란 남한사회의 제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개인만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 여기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이주민들에게는 해당 문화에서 생활함에 있어 문화적응에 따르는 스트레스(cultural adaptation stress)를 극복하고[22], 행동방식과 문화 양식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주요한 적응 과제라고 할 수 있다[23]. 북한이탈주민 같은 대한민국이나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 이질성이 매우 큰 탓에 남한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는 Berry[24]의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와 채정민[25], 김도희[26]의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이들은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의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화·통합을 이루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남한 문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학습 등을 통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문제점

3.1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주민의 한국 입국 현황은 2013년 8월 기준으로 25,560명을 넘었고, 여성의 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앞질러 2013년에는 7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그 동안의 가족단위 입국에서 여성 또는 모자입국이 늘어나는 중요한 변화이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가 58.10%의 비율을 차지하고, 40대 이상이 26.1%, 20세 미만인 15.8%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경제활동 가능 인구의 비율이 높다[28].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이후 경제활동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일용직 근로자(24.0%)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정규직 근로자(19.4%), 계약직 근로자(18.7%), 실업자(26.3%)의 순으로 나타났다[28].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율은 38.8%, 실업률은 8.8%로 국내 전체 고용률 60.4%, 실업률 2.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9]. 재북 직업별 유형은 무직부양이 51.1%, 노동자가

38.1%의 비율을 차지하고 그 외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재북 학력별 현황을 보면 1960년~1994년의 시기까지는 고졸자가 46%, 대졸자가 37%로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의 소유자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후 최근까지 입국한 대상자중 고등중학교 졸업자가 전체의 70.7%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94년 이전의 탈북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외교관, 유학생, 군인 등이 주 대상이었으나, 이후 탈북의 양상은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생계형 탈북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28].

지역별 거주현황은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이 6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4년 이후 수도권 이외 지역을 배정 받은 비율이 1995년 35%, 1998년 43%, 2000년 54%까지 증가[30]하였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수도권에서의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방에 비해 편의시설이나 지원 단체 등의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28].

북한이탈주민의 연구에서 설진배, 송은희[20]는 북한이탈주민이 높은 이직률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어 그들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직업교육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기 존중감을 회복하고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타인과의 심리적·문화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강창구[30]은 취업 및 직업교육연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부재하며, 하나원교육과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적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은 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통일부가 주무부처이기에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28].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구조의 열악성, 심리, 사회적 고립, 빈곤 등으로 인해 사회안전망 제도에서 벗어나고 있다. 실제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비교하였을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률은 현저히 낮은 반면 실업률이 높으며, 생계 급여 지급률은 최대 약 20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국민 월 평균 소득의 약 65%에 밀도는 실정임에 따라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 외에도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사회안전망 의존도, 열악한 건강상태, 학력 및 경력의 단절, 사회의 편견 등이 사회부적응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8].

이와 같은 부작용 현상의 결과 탈북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한국 일반 학생에 비해 5배가량 높으며, 대학생들의 학업중도 포기율 또한 한국대학생들의 중도 포기율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또한 자살률은 한국 자살율의 3배가 많고, 정신과 진료 또한 전체 진료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 입북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20][28]. 이와 같은 현상은 형식적인 정착위주의 정책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책 및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28].

3.2 북한이탈주민관련법에 따른 지원 제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즉,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적응 및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신속한 적응 및 정착에 목적을 두고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1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책무성은 국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4조의2)와 통일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4조의3)에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은 통일부, 지자체, 민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지원으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3개월간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후 거주지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기능과 역할은 북한이탈주민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30조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업무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 사업, 취업지원 사업,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장학사업,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민간단체 협력사업,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적시하고 있고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 규정으로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담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이 주도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전담공무원, 부서가 없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다문화가족¹⁾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은 안정적인 가족생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의 목적(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무성(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인력을 배치해 두고 있다. 다문화가족법은 기본계획을 정부적 차원 5년 단위로 수립(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하고, 다문화가족은 국무총리 소속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에 2013년 현재 전국 203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 제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에서의 사회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상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공무원교육(다문화가족지원법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전문 인력양성(다문화가족지원법 제13조의2)의 제도를 실시하여 초기 정착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적응에 필요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의2)를 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의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통해 정책 협의 및 조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6조)을 하고 있다. 실제 중앙정부 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통일부, 교육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분산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실효성은 부족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지역 내에서 적응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2010년 이후 지역적응센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 15조의2)가 본격 운영되고 있어, 2013년 현대 전국 16개 시·도에서 28개소의 지역적응센터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결혼이민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터가 통일부 예산으로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 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적·실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제도로 사회적응교육(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15조)으로 하나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10조)에서 기본 교육(12주 392시간)과 지역적응교육(지역하나센터에서 4주 80시간), 정착금지원²⁾(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1조), 주거지원³⁾(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0조), 취업지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16조),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5조), 생활보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6조), 연금특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6조의2) 교육지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24조)등의 정착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제도는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로 한국에서의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장기적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4. 연구방법

4.1 연구방법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와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조사기간은 2015년 1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은 242명이었으나, 무응답의 항목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225(92.9%)명의 설문지가 활용되었다.

4.2 측정도구

4.2.1 직업교육 직종

본 연구에서는 직업교육 직종 측정 도구는 한국고용정

- 2) 정착금지원은 기본급 1인 세대기준 700만원-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거주 장려금 130만원이다.
- 3) 주거지원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1인 세대 기준 1,300만원이다.

보원이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 KNOW)의 직종을 4계층으로 구분한 박유진[28]의 직업별 평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창조계층에 해당하는 그룹에 속하는 직업은 50개로 도출되었으며, 고크력 계층 그룹에 속하는 직업은 14개, 숙련계층 그룹에 속하는 직업은 15개, 저숙련, 저학력 그룹에 속하는 직업은 59개로 구성되었다.

4.2.2 직업교육 기간 및 기관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의 직업교육 기간 및 교육기관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유시은[23]이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적 적응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측정도구에는 직업교육의 여부, 남한 정규교육 여부, 교육 내용, 교육 기간, 이수교육의 취업 도움 정도, 자격증 여부, 이직 여부, 직업교육 기관의 유형(대안학교, 검정고시학원, 정규학교, 기술학원, 취득 자격증, 취미학원, 기타)로 구성되어있다.

4.2.3 고용상태와 소득수준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의 고용상태와 소득수준의 조사를 위해 유시은[23]이 북한이탈 주민의 경제적 적응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측정도구는 남한 취업 여부, 취업 경험, 취업기간, 취직경로, 직위/직급, 월평균 급여, 퇴직사유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2.4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생활만족도, 직업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관계 만족도, 건강 만족도 총 5요인, 44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로,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재화[24]가 사용한 도구를 재구성한 도구인 생활만족도 척도 13문항을 활용하고자 한다. 생활 만족도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직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엄권[25]의 도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직무 내적만족요인(직무자체, 장래성, 성취감) 12문항, 직무 외적만족 요인(보상체계, 인간관계) 8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총 20문항이다. 직업 만족도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주거환경, 가족 및 친척관계, 신체 및 정

신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김미자[26]의 도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주거환경 3문항, 가족 및 친척관계 3문항, 신체 및 정신건강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거환경, 가족 및 친척관계,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만족도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거환경, 가족 및 친척관계,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2.5 심리 문화적응 전략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채정민[25]이 Berry의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유형 개념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심리적 문화적응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해 묻는 것으로, 북한 문화 지향성 8문항과 남한 문화 지향성 8문항 총 16문항,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심리적 문화적응을 하기 위한 노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4.2.6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Zimet과 그의 동료들[29]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박수경[27]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척도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가족, 친구,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얼마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생활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총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4.2.7 문화적응 스트레스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Sandhu와 Asrabai[18]이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를 엄미도[19]가 활용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이후 남한사회에서 문화적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꼈는지에 대한 것을 측정하며, 적대감, 차

별감, 소속감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한사회에서 받은 문화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4.3 자료분석방법

첫번째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력, 연령, 소득, 남한거주기간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적응 및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경제적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 사회문화적 적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으며, 심리·사회적인 적응 변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했으며 2단계에 독립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했다.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심리문화적 적응 전략, 사회적지지, 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았다. 통계분석 프로그램은 SPSS 22.0을 사용하였다.

5. 연구 결과

5.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우선,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68.0%)가 여성(32.0%)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40대 33.3%, 50대 24.9%로, 40-50대의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분포되었다. 남한 거주기간은 3년 이상이 75.1%로 대부분 이였으며, 월 평균소득은 200만 원 이하가 94.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에서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64.4%로 가장 많았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Sex	Male	153	68.0
	Female	72	32.0
Educational attainment	Under HSG	145	64.4
	Over HSG	80	35.6
Age	Under 20's	26	11.5
	30's	33	14.7
	40's	75	33.3
	50's	56	24.9
	Over 60's	35	15.6

Income	Under 1M won	61	27.1
	Under 2M won	152	67.6
	Under 3M won	11	4.9
	Under 4M won	-	-
	Over 4M won	1	0.4
residence period	Under 1 year	5	2.2
	1 to 3 years	51	22.7
	3 to 6 years	85	37.8
	Over 6 years	84	37.3
Total		225	100

Note. HSG=High School Graduation

5.2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취업상태 및 취업경험에 관한 현황과 취업을 위한 교육실태 및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취업상태는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135명(60.0%)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위해 직장을 구하고 있는 경우가 66명(29.3%), 취업을 포기한 상태가 3명(1.3%)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실업(구직 중에 있거나 취업을 포기한 상태)자 비율은 30.6%로 국내 전체 실업률 4.6%(청년 실업률 9.9%)⁴⁾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98명(30.2%), 계약직 86명(38.2%), 일용직 56명(24.9%)로 나타나 계약직과 일용직의 63.1%로 고용의 질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36.4만원으로 국내 월평균 근로소득 311.6만원보다 매우 낮은 근로소득을 보이고 있다. 근로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 61명(27.1%), 100-200만 원 152명(67.6%), 200만 원 이상 12명(5.3%)으로 100-200만원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Table 2>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Employment status</i>	n	%
Employed	135	60.0
Looking for a job	66	29.3
Abandonment of employment	3	1.3
Others	21	9.4
<i>Employment types</i>		
Full-time	68	30.2
Part-time	86	38.2
Daily job	56	24.9
Self-employment and so on	16	6.7
<i>Monthly income</i>		
Under 1M won	61	27.1
1M-2M won	152	67.6
Over 2M won	12	5.3
Total	225	100.0

4) 통계청, 100대 지표, <http://www.kosis.kr>, 2017.12.23

한편,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1인당 취업을 위한 교육은 2.3회로 나타났으며, 취업교육을 직종계층별⁵⁾로 살펴보면, 숙련계층 3.8%, 고학력계층 3.4%, 창조계층 25.5%, 저숙련계층 67.2%로 나타나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저숙련계층의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Table 3> Job Education Characteristics

Class	n	%
Skilled-class	9	3.8
Higher educational-class	8	3.4
Creative-class	57	25.5
Low-skilled class	151	67.2
Total	225	100.0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이 취업에 도움을 준 정도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0%로 나타나,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Help in job training

	n	%
Very much helpful	97	43.0
some what helpful	128	57.0
Total	225	100.0

5.3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남한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문화적응노력의 정도, 남한친구관계,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은 3.52점으로 나타나,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정도별로 살펴보면, 매우 만족 14명(6.2%), 대체적으로 만족 106명(47.1%),

5) 직종계층구분은 한국직업정보시스템과 박유진[4]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4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숙련계층=고등교육이 요구되지 않으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련된 능력 및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직업군; 고학력계층=주로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종사하지만 숙련 요구수준이 높지 않아 창조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직업군; 창조계층=고등교육을 필요로 하면서 숙련 및 창조성의 발휘가 중요시되는 직업군; 저숙련계층=고등교육 및 창조성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 직업군

보통 91명(40.4%), 불만족 12명(5.3%), 매우 불만족 2명(0.9%)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도 14명(6.2%)으로 이른다.

남한의 사회문화적응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내용을 분석해보면, 우선 남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 정도는 평균 3.8점으로 미래 희망에 대하여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만족과 가족만족, 건강만족에 대해서는 평균 3.64, 3.62, 3.02점으로 보통이나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문화에 적응하는 노력정도는 평균 3.85점으로 남한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대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한친구관계는 평균 3.23점으로 보통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남한생활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과 남한사람들이 자신들을 적대적으로 인식한다는 지각의 정도인 문화적응스트레스는 2.93점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느 정도 차별감과 적대시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Socio-cultural adaptation status (N=225)

	Min.	Max.	Average	SD
Overall	1.00	5.00	3.52	0.732
Future hope	2.00	5.00	3.80	0.587
Housing satisfaction	1.00	5.00	3.64	0.706
Family satisfaction	1.00	5.00	3.63	0.706
Health satisfaction	1.00	5.00	3.02	0.762
Friendship	1.00	5.00	3.24	0.783

5.4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 전략, 사회적 지지, 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단계에 투입된 통제변수(연령, 나이) 중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 심리사회적 적응 전략, 사회적지지, 적응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투입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의 설명분산이 24.0%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심리문화적으로 적응하고자하는 노력인 심리문화적응전략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t=3.56, p<.001$).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심리 문화적으로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높을수록 그들의 삶의 만족도 또한 증가함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지지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t=4.96, p<.001$).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탈주민이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5.5 연구결과 요약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적응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적 적응이 낮은 원인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비용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취업을 해도 계약직이나 일용

<Table 6>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Adaptation Strategy,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Stres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N=225)

Variables		Model 1				Model 2			
		B	SE	β	t	B	SE	β	t
Control variables	Age	0.00	0.00	-0.02	-0.30	-0.01	0.01	-0.07	-1.12
	Sex	-.21	0.17	-0.09	-1.29	-0.11	0.15	-0.05	-0.78
Independent variables	Psychological adaptation strategy					0.68	0.19	0.24	3.56***
	Social support					0.69	0.14	0.34	4.96***
	Adaptive stress					-0.27	0.13	-0.12	-2.05*
F		.83				14.10***			
R^2		.01				.24			
Adj. R^2		.00				.23			
ΔR^2						.24***			

직의 비중이 높아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취업의 질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은 기술교육이 전반적으로 저숙련 직종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취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은 원인으로도 평가 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상태는 전반적으로 높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친구관계,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리문화적 적응전략과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남한사회에서 심리문화적 적응전략과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사회통합을 위한 비판과 대안

6.1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책 방향성에 대한 개선 방안

남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정책의 방향성과 정체성의 속성으로 설명된다[3]. 정책의 방향성이란 측면은 정책 대상 집단을 공식적인 정책영역에 어느 정도 수용하는가의 문제로 수용 정도에 따라 포섭과 편입, 배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포섭과 편입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을 구축하는 것이고, 배제는 아예 정책을 구축하는데 있어 이들을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정체성의 속성은 대상 집단 정체성의 견고성과 명확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정착하였다는 공통점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상이한 탈북 동기, 과거 출신배경 및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함께 어울리지 못하여 그 정체성이 더욱 불분명한 측면도 있다. 또한 이들을 대하는 남한의 태도 측면에서도 문제는 발견된다. 한 측면에서는 민족 및 인권적 차원에서 동정심과 동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이

들에게 투사되어 의심과 불신이 혼재된 감정을 갖기도 한다[30]. 이에 남한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포섭과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남한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철저히 주변화 되고 있는 것이다[3].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주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병역문제라고 할 수 있다[3]. 병역법 제64조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를 강제조항으로 인식하고 한국 입국 후 하나원에서 일괄적으로 병역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징병검사연령이 되면 거주지 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신청서를 송부 받아 제출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희망할 경우에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군 입대를 희망해도 군대에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3]. 하지만 이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갖고 있음에도 병역의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 차별인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3]. 실제로 강창구[13]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0년 북한을 이탈한 주민 가운데 징집 연령층인 19~25세 청년 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한 결과, 면접에 참여한 북한이탈 청년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 복무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물론 남한 청년의 2/3은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를 찬성하고 있으나 1/3은 보안(63.9%), 정체성의 혼란(25.2%)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된바도 있긴 하다.

이상과 같이 포섭과 편입이라는 정책의 방향성과는 달리 정체성은 주변화 방향의 정책들은 북한이탈주민들 자신이 남한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남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이 남한사람과 동일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거시적 체제 차원에서는 제도가 일정수준 안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완전한 사회적응의 기반이 되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회통합은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적인 정책을 배제하고 그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적 개선을 통한 정책의 모순 해결이 필요하다[27].

6.2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경제적 적응을 위한 취업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동시에 성공적인 사회문화적 적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는 남한 주민들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도 저숙련 직종에 집중되어 열악한 취업상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그들의 남한체제에 통합되기 위한 경제적 적응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경제적 적응의 문제의 구체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직업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진석[1]은 지역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취업교육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발적인 취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요인으로 그들의 초기 정착을 위한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그들은 기초수급(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수급정책은 상대적으로 남한의 다른 빈곤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평성 문제도 제기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정체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개별적인 성향과 역량 등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남한 노동시장 내부사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주요 중심의 일괄적인 직업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돕고, 그로 인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취업을 노력을 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들이 취업활동에 소극적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초수급을 일괄적 지급이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차별성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장려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취업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의 노동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력과 역량,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가 필요하다.

6.3 사회문화적 동화를 위한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심리적 측면에서도 정신적·심리적 박탈감, 소외, 외부의 편견,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차별, 편견, 열등감 등은 결국 합리적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현재 남한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혜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기조의 동화정책들이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받고 있기도 하다[3]. 즉, 60년 넘는 세월 동안 상반되는 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교류 없이 각기 다른 사회화의 과정을 밟아 온 남과 북의 주민들은 동질감을 갖기 힘들어도 불구하고, 단일한 혈통이라는 점을 유난히 강조함으로써 양자의 이질성을 도외시한 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남한사회로의 동화를 강요하는 것이다[11]. 이처럼 사실상 지금까지 실시되어 온 정부 주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초기 생활기만만 마련된다면 쉽게 동질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 것이다 [3]. 이는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남한사회의 체제에 적응하고 가치통합을 이룰 것인가로 다루지 않고, 초기 적응에만 초점을 맞춰 이들을 체제 내에 수용, 편입하고 초기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장기적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갈등의 축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내부구성 다양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탈북자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역시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하나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정착교육은 12주간의 초기 정착교육을 마친 후, 거주지 하나센터에서 4주간 80시간의 초기 집중교육을 받고 있다. 초기 집중교육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이해, 생활교육, 취업과 진학지도 등이다. 동화를 전제로 한 일률적인 남한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교육은 정보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성찰, 한국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권리 및 의무, 그리고 의식과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민간 단체를 통한 교육과 남한 사람과의 교류활동도 중요하다. 지역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구축하고, 현재 거주지 보호담당관 역할을 하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고용센터의 취업보호 담당관의 역할이 상호 연계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들은 탈북 이후 남한에 와서 하나된 수로 후 지역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초기 정착교육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체제통합과 사회가치적 체제통합이라는 두 측면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문화가족법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경제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책무성의 문제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책무성은 국가와 통일부에 두고 있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책무성을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법에 비하여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전담공무원, 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개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포섭과 편입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정책을 구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남한사회 구성원과는 차별성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이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남한의 빈곤층과의 공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들 스스로 경제적 자립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이 민족주의적인 기초의 동화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박탈감, 소외, 외부의 편견,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교육체제와 정보 전달형 교육으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남한 사회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동화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민간참여의 확대와 문화이질감을 없앨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기존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넘어 그들 스스로 한국 사회에의 적응과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주도형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REFERENCES

- [1] J.S.Lee,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Issue and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Korea", *Unification Strategy*, Vol.14, No.4, pp.131-157, 2014.
- [2]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North Korean Settlement Support Practice Manual, 2016.
- [3] S.D.Kwon, "A Study on South Korean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Political Research*, Vol.23, No.1, pp.101-126, 2014.
- [4] Y.J. Park, "Refl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dentity and national values, and social integration", *Midry*, Vol.5, pp.6-21, 2011.
- [5] E.H. Song and J.B. Seol, "Perceptions of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Korean Northeast Anonchong*, Vol.3, No.67, pp.367-392, 2013.
- [6] S.D.Ko, "Popular perception of Social Integration Level in East and West Germany after the Unification", *The Journal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 Vol.28, No.2, pp.269-288, 2010.
- [7] Kreckel, R.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in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edited by Marcus, J. T. New Bur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pp.85-95. 1999.
- [8] Landecker, W. S. "Types of integration and their measur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6(4), pp.332-340, 1951.
- [9] Duhaime, G., Searles, E., Usher, P. J., Myers, H., and Fréchette, P. "Social cohesion and living conditions in the Canadian Arctic: From theory to measure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66, No.3, pp.295-318, 2004.
- [10] Rajulton, F., Ravanera, Z. R., and Beaujot, R. "Measuring social cohesion: An experiment using the Canadian national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80, No.3, pp.461-492, 2007.
- [11] K.J.Hong, "Social 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fter unification: Public opin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theory".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39, No.3, pp.369-390, 2000.
- [12] Y.H.Oh et al. "Analysis of social integration effect of lifelo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vulnerable groups (Part I)". Seoul: Korea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Center, 2010.
- [13] Boskoff, A. and Pendleton, W. W. "Sociology: The study of man in adaptation". by John T. Doby, Alvin Boskoff and William W. Pendleton. Lexington, Mass.: DC Heath, 1973.
- [14] Barker, R. L. *The social work dictionary*. Natl Assn of Social Workers Pr, 1995.
- [15] E.H.Song and E.S.Shi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cial Integration". *Journal of Global Politics*, Vol.5, No.2, pp.7-30, 2012.
- [16] Slack, T., and Jensen, L. "Underemployment across immigrant gener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Vol.36, No.4, pp.1415-1430, 2007.
- [17] Potocky-Tripodi, M. "Refugee economic adaptation: Theory,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Vol.30, No.1, pp.63-91, 2003.
- [18] W.T.Jeon, "A Study on Adaptation and Self-Identity according to the Main Social Background of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1, No.2, pp.109-167, 1997.
- [19] I.J.Yo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inding employment and maladjustment", *Social Science Society Conference of Korea Society*, pp.247-252, 2000.
- [20] J.B.Seol and E.H.Song, "The Effect of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Self-esteem and Economic Adaptation on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14, No.4, pp.291-314, 2013.
- [21] J.M. Lee and S.Y. Hwang,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Social Welfare Policy*, No.33, pp.61-84, 2008.
- [22] Gil, A. G., Vega, W. A., and Dimas, J. M. "Acculturative stress and personal adjustment among Hispanic adolescent boy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2, No.1, pp.43-54, 1994.
- [23] Brislin, R. W., Landis, D., and Brandt, M. E. "Conceptualizations of intercultural behavior and training".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Vol.1, No.1, pp.1-35, 1983.
- [24] Berry, J. W.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29, No.6, pp.697-712, 2005.
- [25] J.M.Chae, "Psychological and Cultural Adaptation Mechanism and Adjustment Behavio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2003.
- [26] D.H.Kim, "Study on the Effect of Marriage Immigrant Women on Parenting Efficac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2008.
- [27] J.A.Jo et al. "Sa-ter-min's Cultural Conflict and Cultural Integration Plan",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2006.
- [28] H.S.Park, "Improvement pla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to establish a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Vol.52, pp.401-420, 2013.

- [29] J.W.Moon, "The relationship the social enterprise and the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ophthalmology, No.46, pp.157-197, 2015.
- [30] T.Kim. "A Study on Smart Warning Triangle," Journal of The Korea Internet of Things Society, Vol.4, No.1, pp.37-41, 2018.

최 장 원(Jang-Won Choi) [중신회원]



- 2005년 2월 : Georgia College & State University MBA 졸업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0년 4월 : 덕인복지재단 대표 이사
- 2010년 9월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4월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 2020년 현재 : 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